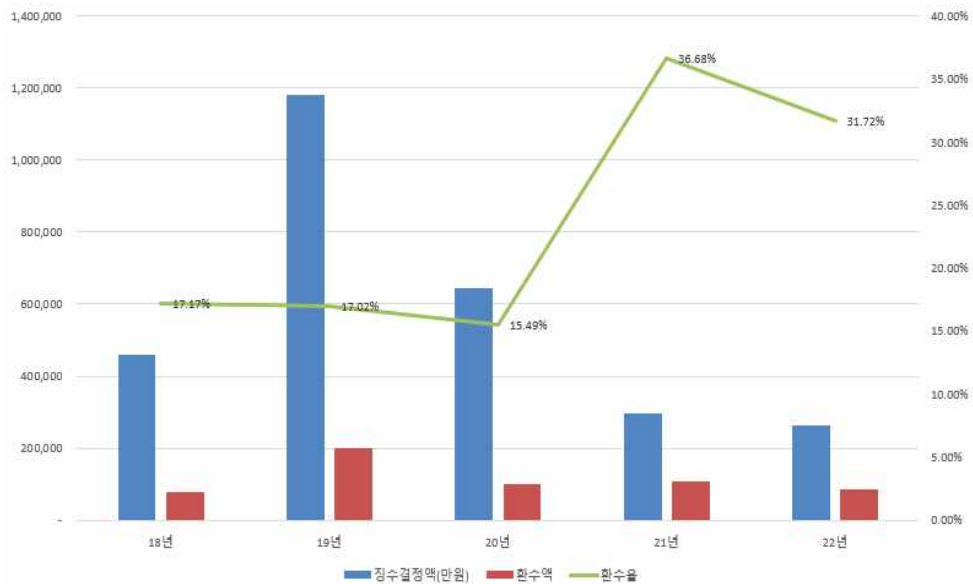


과제분야	노동복지분야	수요분야	트랙1
과 제 명	도메인 특화 AI 기반 지능형 산재 부정수급 탐지 지원 서비스		
중복성 검토 여부	해당없음		
제출부처 및 부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제출부서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 부정수급예방기획부
담당자/연락처	조문주 과장 ☎ 052-704-7467		

과제 개요

□ 과제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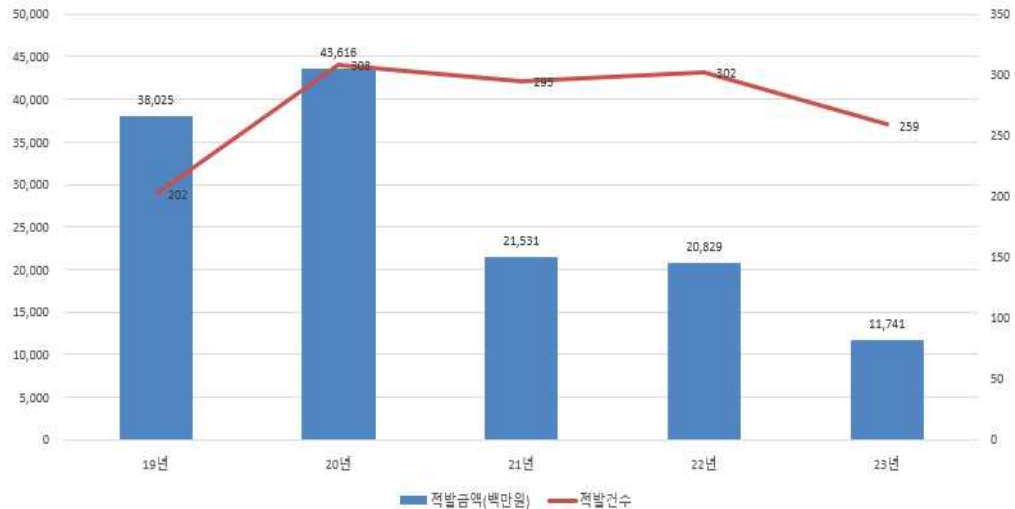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함. 그 중 산업재해 보상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근무 중 피해를 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활급여 등의 산재보상제도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의료 지원, 재활, 경제적 안정 및 직업 복귀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5년(2019년~2023년) 통계자료 분석결과, 연평균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73건, 적발금액은 연평균 약 271억 5천만원으로 부정수급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



< 산재보험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현황 >

(출처 : 23년 근로복지공단 통계자료)

- 공단은 산재보험과 관련된 사기청구 및 부적절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적발에 한계가 있음.
- 지속적인 관리로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적발 건수는 큰 변화가 없으며,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부정수급 환수액 평균은 약 11.44억으로 환수율은 23.6% 수준으로 안정적인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의 원천적인 차단이 필요함.



< 산재보험 연도별 부정수급 징수 결정액, 환수액 현황 >
(출처 : 23년 고용노동부 자료)

- 산재보상제도의 부당청구는 산재보험 제도의 재정 부담, 보험료 인상, 보상제도의 신뢰성 저하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 AI 도입 필요성 · 시급성 · 중요도

- 산재보험에 대한 부정수급의 적발금액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부정수급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진화하고 있어 패턴 파악에 어려움이 많음
-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방법은 기획, 신고, 인지, 합동 조사의 방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전체 부정수급 중 약 84%가 기획과 신고 조사를 통한 탐지로 이루어지고 있음. 공단에서 직원들에 의해 부정이 감지된 인지 조사는 약 4%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인지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AI 예측모델을 활용한 부정수급 탐지가 필요함.

조사종류	빈도	비율
신고	1,889	48.0
기획	1,429	36.3
합동	455	11.6
인지	166	4.2

< 조사유형별 현황 >
(출처 : 근로복지공단 빅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통계자료)

< 2023년 특정감사 지적 결과 >

-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산업재해 보상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산재보험 제도의 재정 위험 및 부적절한 보상을 해결하고 부정수급 탐지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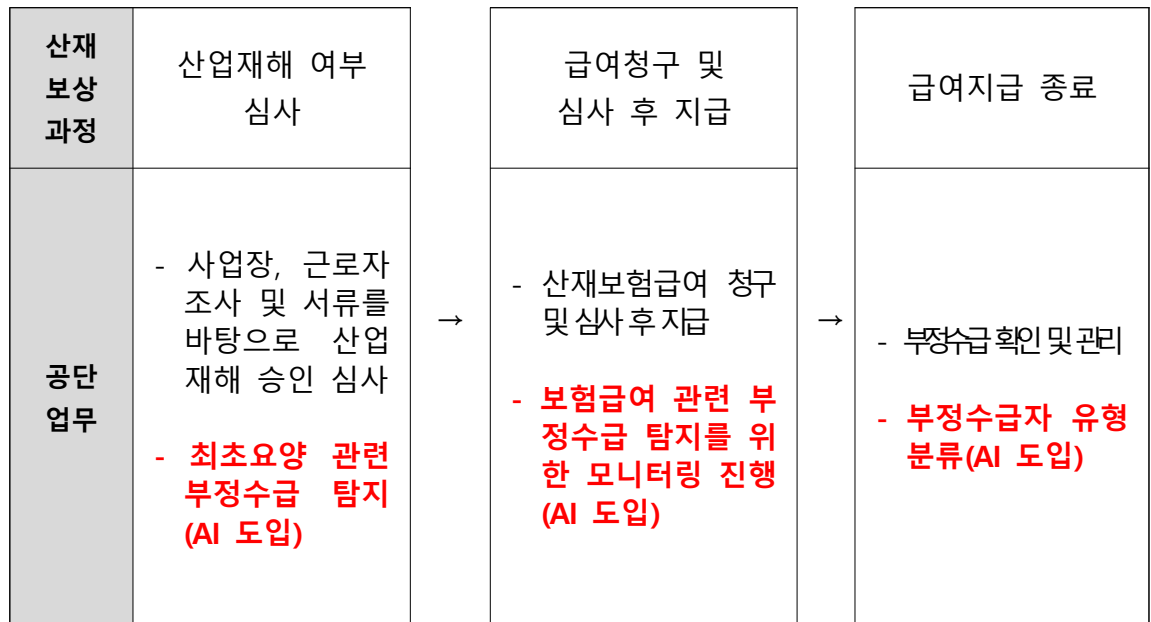


- AI 예측모델을 활용해 공단 직원의 인지 조사를 지원하면 부정수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음. 이는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감소시키고 산업재해 보상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공단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해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부정수급 탐지 업무

- 산업재해 발생 후, 재해자가 산재보험 최초요양을 신청하고, 공단은 서류와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산업재해 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최초요양 관련 부정수급을 탐지하거나 산업재해 승인을 결정함
- 산업재해 승인 이후 급여청구 심사 및 지급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주의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급여 관련 부정수급을 탐지하고 있음
- 부정수급자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부정수급 경위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관리함

추진내용



< 부정수급 업무 프로세스 >

□ 제공 서비스

○ [서비스1]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 지원

- 내부 고발, 주변인 제보 등 신고나 직원의 경험을 이용하여 인력을 활용해 부정수급을 탐지하는 업무를 AI를 활용한 부정수급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단 직원의 업무를 지원함
- 다양한 사례의 산업재해 신청 건에 대해 부정수급 판정 결과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공단 업무담당자의 판단에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

○ [서비스2] AI 기반 부정수급 유형 분류 서비스

- 부정수급은 다양한 관점으로 유형을 정의할 수 있으나 부정수급 발생 전후로 구분한 시기별 분류에 대한 관점의 부정수급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AI 모델 서비스

를 제공함

- [유형1] 최초요양 관련 부정수급: 사고 발생 이후 산업재해 승인까지의 기간 중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형	세부내용
1	재해경위 조작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건을 조작하여 통상적인 산재사고로 위장
2	근로자성 조작	사업주 등 근로자가 아닌자가 근로자로 조작
3	사업장 바뀌치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다른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조작

- [유형2] 보험급여 관련 부정수급 : 산업재해 승인 이후 급여청구부터 급여지급 종료까지의 기간 중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형	세부내용
1	휴업급여 부정수급	산재 요양 중 취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취업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 부정 수령
2	장해상태 허위조작	장해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 조작하여 장해등급을 높임
3	유족연금 부정수급	재혼 등 수급자격 상실되는 경우를 신고하지 않고 유족연금 부족 수령
4	기타 보험급여 부정수급	간병, 이송료 등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 청구 또는 조작하여 부정 수령

- [유형3] 그 밖의 부정수급 유형 : 시계열 분류가 어려운 특이항목

	유형	세부내용
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비 부정수급	실제 행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진료비로 청구하거나 부풀려 진료비 부정 청구

□ 연도별 추진 계획: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1차년도] 산재보험 부정수급 AI 탐지모델 개발

- 학습데이터 구축
 - 근로복지공단 내 최초요양, 요양급여 관련 데이터 수집, 분석
 - 최초요양 및 요양급여 데이터를 수집·정제하여 이상 패턴 분석에 적합한 고품질 학습데이터 세트를 구축함. 데이터 라벨링과 특징 추출을 통해 정상수급, 부정수급 사례를 구분하고, AI 모델의 학습 효율성을 높임
- 부정수급 탐지 AI 모델 개발
 - SVM, MLP, D-Tree, XGBoost 등 최신 AI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AI 모델 개발
 - 다양한 AI 기술을 적용해 부정수급 탐지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각 알고리즘의 장점을 통합하여 신속하게 탐지하여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함
- 통계분석 기반의 부정수급 판정 결과 분석을 통한 근거 제시 기능 개발
 - 민감정보가 많아 공단에서 지정한 보안 공간에서 데이터 활용하여 모델 개발
- MLOps 솔루션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분석, 학습 데이터 세트 구축, 모델 학습, 평가, 배포, 서비스 등의 전체 과정을 개발

	<p>[2차년도] 산재보험 부정수급 AI 탐지모델 실증 및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상반기): 부정수급 최초접수 건수가 많은 본부를 대상으로 실증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 지역: 경인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2024년 근로복지공단 데이터 분석결과) ○ 고도화(하반기): MLOps 기반의 AI 모델 재학습 및 배포 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전체 지역으로 확산 및 실증 진행 - 신규 산재보험 부정수급 데이터의 지속적인 재학습 및 객관성/신뢰성 확보
<p>활용·확산방안</p>	<p>□ 사업 결과물의 공단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부정수급 AI 탐지시스템은 공단 담당자에게 부적격자 판단 및 최초요양 관련 부정수급 의심자들과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산업재해 환자에게 신속하게 승인하고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함 <p>□ 부처 보유시스템 연계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통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하여, 안전하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여, AI 모델이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 ○ 클라우드 기반 모델 훈련 및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에서 GPU나 TPU를 활용하여 모델 훈련과 최적화 수행 - 데이터 전처리, 모델 선택,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등을 관리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여 모델 훈련 - 신규 유입되는 데이터의 지속적인 재학습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예측 및 추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부정수급 탐지모델을 배포하여, 실시간으로 산업재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예측 - 클라우드에서 AI 모델을 API로 배포하여 다양한 시스템의 예측 결과를 실시간으로 연계 <p>□ 사업 기술 결과물의 타 산업 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부정수급 지능형 AI 탐지시스템은 유사한 업무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공무원 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 ○ 민간보험사와의 협업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들의 데이터를 민간보험사 제공함으로 부당한 이중 수급자 탐지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신속하게 적발 후 관련 내용을 보험사에 공유하여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여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함 <p>□ 사업 기술 결과물의 해외 확산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은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CA(AWCA Asian Workers' Compensation Association)의 의장국 - ISSA(Th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의 회원국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와 베트남 사회보장청(VSS)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몽골 사회보험청(GASI)와는 교류협약을 통한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복지공단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부정수급 지능형 AI 탐지시스템을 홍보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통해 확산할 계획임																																													
데이터 보유·제공																																														
부처 데이터 보유현황	<div>□ 공단보유 데이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보유·제공 여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AI 지원 시스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공단에서 자체 보유하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데이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연계할 계획임 <div>< 주요데이터 요약 정의 ></div> <table><tr><th>데이터명</th><th>수량(건)</th><th>형태</th><th>데이터 상세</th><th>보유 현황</th></tr><tr><td>산업재해자 원부</td><td>연간 130,000건</td><td>DB</td><td>산업재해자의 이름, 주소, 직종, 상병 등 개인정보</td><td>내부</td></tr><tr><td>산업재해청구</td><td>280,000</td><td>문서데이터 (PDF)</td><td>청구제출기록, 빈도 및 패턴, 부상유형, 작업장 조건 불일치</td><td>내부</td></tr><tr><td>의료기록</td><td>3,866,359</td><td>문서데이터 (PDF)</td><td>진단서, 치료기록, 치료 항목 및 기간</td><td>내부</td></tr><tr><td>고용정보</td><td>8,608,000</td><td>DB</td><td>고용 및 임금기록</td><td>내부</td></tr><tr><td>기업환경</td><td>1,760,323</td><td>DB</td><td>작업장, 작업장 안전기록</td><td>내부</td></tr><tr><td>내부고발자신고</td><td>2,940</td><td>문서데이터 (PDF)</td><td>사기가 의심되는 정보</td><td>내부</td></tr><tr><td>공공기관데이터</td><td>37,230,000</td><td>DB</td><td>직장인 건강보험가입자</td><td>외부</td></tr><tr><td>사기 사건 이력</td><td>3,869</td><td>문서데이터 (PDF)</td><td>이전 사기 사건 기록</td><td>내부</td></tr></table> <div>* (2025년 1월 기준) 데이터 보유량임</div>	데이터명	수량(건)	형태	데이터 상세	보유 현황	산업재해자 원부	연간 130,000건	DB	산업재해자의 이름, 주소, 직종, 상병 등 개인정보	내부	산업재해청구	280,000	문서데이터 (PDF)	청구제출기록, 빈도 및 패턴, 부상유형, 작업장 조건 불일치	내부	의료기록	3,866,359	문서데이터 (PDF)	진단서, 치료기록, 치료 항목 및 기간	내부	고용정보	8,608,000	DB	고용 및 임금기록	내부	기업환경	1,760,323	DB	작업장, 작업장 안전기록	내부	내부고발자신고	2,940	문서데이터 (PDF)	사기가 의심되는 정보	내부	공공기관데이터	37,230,000	DB	직장인 건강보험가입자	외부	사기 사건 이력	3,869	문서데이터 (PDF)	이전 사기 사건 기록	내부
	데이터명	수량(건)	형태	데이터 상세	보유 현황																																									
	산업재해자 원부	연간 130,000건	DB	산업재해자의 이름, 주소, 직종, 상병 등 개인정보	내부																																									
	산업재해청구	280,000	문서데이터 (PDF)	청구제출기록, 빈도 및 패턴, 부상유형, 작업장 조건 불일치	내부																																									
	의료기록	3,866,359	문서데이터 (PDF)	진단서, 치료기록, 치료 항목 및 기간	내부																																									
	고용정보	8,608,000	DB	고용 및 임금기록	내부																																									
	기업환경	1,760,323	DB	작업장, 작업장 안전기록	내부																																									
	내부고발자신고	2,940	문서데이터 (PDF)	사기가 의심되는 정보	내부																																									
	공공기관데이터	37,230,000	DB	직장인 건강보험가입자	외부																																									
	사기 사건 이력	3,869	문서데이터 (PDF)	이전 사기 사건 기록	내부																																									
데이터 제공	<div>□ 제공 방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윤리적 검토 : 개인정보 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비식별화 및 익명화 :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제거하고, 데이터의 민감도를 낮추는 비식별화 및 암호화 작업 수행○ 데이터 제공 목적 명확화 : 외부 기업의 활용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공익적 또는 연구 목적에 한정된 활용범위 설정○ 협약 체결 : 데이터 제공의 조건, 사용 제한, 보안 관리 책임 등을 포함한 협약(MOU 또는 계약서)을 체결○ 데이터 접근 통제 : API 또는 안전한 데이터 교환 플랫폼을 통해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고, 사용 기록을 모니터링○ 보안 조치 강화 : 암호화 전송, 접근 권한 관리, 위·변조 방지 등 기술적 보안 조치 시행○ 정기 감사 및 모니터링 : 데이터 사용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정 사용이나 오남용 여부 확인○ 사용자 교육 및 가이드 제공 : 데이터를 받는 기업에 사용 방법과 보안 준수 사항을 안내○ 제공 데이터의 범위 제한 : 최소한의 데이터만 제공하고, 불필요한 정보 공유 방지 <div>□ 제공 근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여 활용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식별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함 ○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 제공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데이터를 제공함
<p>데이터 보안관리</p>	<p>□ 데이터 수집·제공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수집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함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받는 자의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을 제한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공공데이터 제공 기본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공익 증진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제17조(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조(공공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전 비식별화, 암호화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공 후 오남용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야 함 <p>□ 민감정보 해당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PI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공하려면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함 - 제28조의2(가명 정보의 처리) :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민감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음. 가명 정보제공 시 재식별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제한적 제공 및 이용) : 민감정보는 비식별화 또는 가명처리 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공 가능함. 사용 목적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시한 협약 체결 필요함 <p>□ 민감정보 데이터 처리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 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식별화 또는 가명처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전, 개인 식별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함 - 정보 주체의 동의 확보 :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제공에 대해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확보해야 함 ○ 제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계약 체결 : 데이터를 받는 기업과 보안 및 사용 범위 준수를 명시한 계약 체결해야 함 - 제공 데이터 범위 최소화 : 기업이 요청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제공함 - 안전한 데이터 전송 : 암호화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사용해 안전성을 확보함

예산 및 수행체계

□ 사업비

○ 인건비

(단위. 원)

업무구분	급여	개월	인원	계
데이터 수집·가공	5,000,000	12	3	180,000,000
AI모델 개발	7,000,000	12	2	168,000,000
초거대언어모델 (LLM) 개발	7,000,000	12	2	168,000,000
증강검색생성 (RAG) 개발	7,000,000	12	2	168,000,000
평가·검증	4,000,000	9	2	72,000,000
합계				756,000,000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단위. 원)

서버	사양	단가	사용기간	수량	계
운영 서버	vCPU 4, MEM 16, SSD 50GB	206,000	12	1	2,472,000
AI학습 서버	V100*2, GMEM 64, vCPU 16, MEM 64GB, SSD 50G	6,170,120	12	1	74,041,440
AI 서비스 서버	V100*1, GMEM 32, vCPU 8, MEM 90GB, SSD 50G	3,358,080	12	1	40,296,960
NAS	10TB	720,000	12	1	8,640,000
기타	네트워크, 보안 등의 서비스	274,000	12	1	3,288,000
합계					128,738,400

*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 기준

□ 기관별 주요 역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재해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총괄 기획/관리, 실증을 위한 AI 기업 컨소시엄을 지원
- 고용노동부: AI 학습에 필요한 허브 데이터 및 운영플랫폼을 지원하고, 구축된 지능화 서비스의 타부처 공공기관(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으로 확산을 지원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부정수급 AI모델 개발 및 실증, 구축된 지능화 서비스를 통한 산재 근로자지원, 사보험 및 해외 공공기관 확산

< 기관별 주요 역할(R&R) >

부처명	주요 역할
과기정통부	사업 총괄 기획/관리 및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현장 적용 등을 위한 AI 기업 컨소시엄 지원
고용노동부	AI 허브 데이터 및 운영플랫폼 지원, 모델 구축 후 확산지원
근로복지공단	AI 모델을 활용한 산업재해 부정수급 탐지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기대효과

□ 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AS-IS(문제점)	TO-BE(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자 고발 및 업무담당자 능력에 의존한 부정수급자 적발로 인한 비용 및 시간 증대 ○ AI 적용 전, 연평균 적발 건수 : 273건 ('19년~'23년 평균) ○ AI 적용 전, 연평균 적발 금액 : 271억5천만원 ('19년~'23년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 AI 탐지시스템 도입을 통해 비대상자 식별이 가능하며, 산업재해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 ○ AI 적용 후, 적발 건수 : 약 313.9건 ('26년 기준, 약 15% 증가) ○ AI 적용 전, 적발 금액 : 약 298억 9천만원 ('26년 기준, 약 10% 증가)

□ 정량적 기대효과

- 부정수급 적발 건수 약 15% 및 적발 금액 10% 증가로 산업재해 재정적 절감효과 기대
 - 부정수급 적발 건수: 약 313.9건('26년 기준, 약 15% 증가)
 - 부정수급 적발 금액: 약 298억 9천만원('26년 기준, 약 10% 증가)

□ 정성적 기대효과

기대효과

(공단 및 기업)

- 인력에만 의존하던 유형 분류를 AI 모델을 통해 제공함으로 안정적인 산업재해 기금운용과 산업재해 승인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증대
- 산재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 부당청구 감소로 인해 산업재해 보험의 전반적인 비용이 낮아져 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

(근로자)

- 국민에게 제공되는 최초요양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지급을 통해 공단 업무 처리 만족도를 포함한 대국민 만족도 증대
- 비대상자에 지원하는 급여를 방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산재보험에 대한 신뢰성 제고